기 고

최형열 화순부군수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 산불

'소생의 계절' 봄철 산은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화순군 공직자들은 주말과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이동 순찰 등 비상 근무를 하며 산불 예방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관계기관 관계자에게, 봄은 그야말로 '긴장감 최고의 계절'이다.

산림청이 최근 10년(2010~2019)간 발생한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에 일어난 산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1년 평균 발생 산불 440건을 분석했더니 봄(3~5월) 254건으로 5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겨울(12~2월) 103건(23%), 여름(6~8월) 48건(11%), 가을(9~11월) 35건(8%)이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 가장 높다.

산림청이 매년 2월부터 5월까지(봄철), 11월부터 12월까지(가을철)를 특별하게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화순군 역시 예찰은 물론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변 터널 37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체 가구(2만6200)에 안내문을 보내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동참을 유도했다.

300개 마을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받아 '주민참여형 예방' 활동을 펼쳤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태우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다.

예찰과 산불 신속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화순군은 '예찰 강화·현장 중심' 예방 원칙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 대기, 현장 중심의 이동 순찰 체계로 전환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산불 발생 시 조기 발견·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산림청이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산객·논과 밭두렁 태우기·쓰레기 태우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년 평균 발생 산불 440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152건·3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논·밭두렁(71건·16%)과 쓰레기 태우기(62건·14%) 등 소각 산불이 30%를 차지했다. 자연 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화순에서는 귀향하거나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온 외지인, 귀농?귀촌인의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하다. 불법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관행이라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2020년 농촌 지역 단속을 강화했다. 불법 소각 행위 8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476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 단속과 처분이 산불을 단 한 건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단속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항상 하던 것인데, 나 하나쯤이야',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등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화마를 부른다.

등산객 역시 성냥, 라이터 등을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 속 취사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매년 6000건 이상이라고 하니, 산 속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가늠할 수 있다.

봄철에는 등산객뿐 아니라 산나물 무단 채취자, 묘 이장객 등으로 인한 담뱃불 실화가 자주 발생한다. 흡연 후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가 산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리기도 한다.

올해 안동 산불과 고성 산불, 지난해 고성-속초 산불이 우리 화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화마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앞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은 전체 면적의 73.2%가 산림이다. 산불은 한순간에 산림자원,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준다. 매년 화순군, 소방서 등은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을 다니며 캠페인과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없다면 공염불이다.

산불은 인재(人災)다. 공직자, 관계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면, '산불 없는 화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마지막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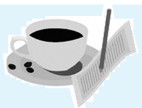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그 결과,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을 장악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이 끝난 뒤, 황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삼성물산은 합병 직전인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고작 300 가구 정도만 공급했으나 주총에서 합병이 결의된 뒤에는 서울에 무려 1만994가구를 공급했다.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에서야 공개했다. 반면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되돌아보면 양 사 합병시점에서 삼성물산은 최대한 깎아내리고, 제일모직은 크게 부풀려 제일모직 1주 가치를 삼성물산 3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조작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자세

지난 4월 29일 △성폭력처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의결을 거쳐 5월19일자로 공포되었다.(일부예외) 일명 'n번방 재발 방지법'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이 우리에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개정 전에는 촬영·유포 행위에 국한되어 관련자만 처벌(아청법 제외)이 되어왔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 누군가는 구입·소지·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행동하며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행위들은 처벌받을 수 있기에 한번쯤 우리의 과거행동을 돌아보고 개정내용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의 명확한 개념은 추후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겠지만 법률적·사전적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이번 개정 내용은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다운로드(저장) 받아 휴대전화, PC 등에 보관(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운로드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시청 행위도 규제해 불법촬영·유포물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 일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잠깐 본걸 알 수 있겠어?" "실수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말하면 되지."라고 말이다. 이건 큰 오산이다. 디지털 관련 범죄가 발전하듯 수사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휴대폰·pc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했는지 재생하여 시청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sns상 행동들 토대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직접 불법촬영·유포 한 행위자는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불법유포·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져 수요가 줄어든다면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차근차근 한번 씩 생각해보며 한층 더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세훈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